



오늘은 경향신문 사설 '청와대가 열흘간 검정 교과서 검토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의 한 부분을 소개한다.

청와대가 현재의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를 발간 전에 이미 열흘간이나 검토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어제 방송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인정 작업 심사가 일단 끝났을 때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한 부를 가져가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청와대까지 검토를 했으니) 아주 좌편향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은 객관적으로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을 우선 들어보시겠다. 어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한 부분이다.

"네. 지나간 얘기인데, 정부 초기에 검인정 작업 심사가 일단 끝났을 때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한 부를 가져가서 한 열흘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좌편향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은 객관적으로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야 하구요. 만약 그런 것이 남아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걸 꼬투리로 해서 제도를 바꾸는 건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의 증언은 현재의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는 박근혜 정부가 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청와대가 직접 검토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은 '좌편향이나 패배주의적 사관'이라는 혐의가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과 정부가 이제 와서 "좌편향 되고 패배주의 사관을 담고 있다"고 공격하는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기 부정이며 자가당착임을 말해주는 증거들은 이 교수 증언 말고도 많다. 박 대통령만 해도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하니 제대로 될 리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토로한 바 있다. 바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박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는 가장 유력한 근거다. 그런데도 어떤 부분이 좌편향 됐는지 제시하지도 않고 무조건 국정화만 외치는 것은 대통령이 역사를 재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내줄 뿐이다. 아닌 말로 검인정 교과서가 정부 말대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있다면 집필자들은 물론 청와대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전국역사학대회협의회 소속 학회 등 28개 학회가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오직 하나의 역사, 하나의 역사 해석만을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로는 민주 시민은 물론 세계화와 다문화 시대를 짚어질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미래 세대를 키워내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28개 학회가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역사학계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살펴본다.

[김용민 브리핑 광고문의] kimyongminpd@gmail.com

■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야당의 국론 분열을 가장 반길 세력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입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연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반대 여론과 관련해 북한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수

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그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북한을 따라 하고 있다며 색깔론에 역공을 폈습니다.

○...“대구·경북 출신이 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어 검찰총장까지, 주요 사정기관 중 4곳을 장악했다는 점도 심각하다.”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지금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인데요. 검찰총장까지 같은 지역 출신이 내정되면서 주요 권력 기관장이 TK일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남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정윤희 문건 논란, 산케이 신문 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주요 사건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의원) “2025년에 공군이 요구하는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주형(한국국방연구원) “(2025년 전투기 개발에)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승민 “저는 대통령께서 (KF-X 사업에 대해) 지금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국방연구원 이주형 박사의 일문일답이었습니다. 핵심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2025년까지 시험용 전투기 6대를 생산하겠다고 KF-X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 하지만 현안보고를 받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비판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KF-X 사업의 기술 이전 불발 사태와 관련해 국방위원장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 했고 정두언 의원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jtbc)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이리) 관심 바랍니다.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첫 사인회

일시 2015년 11월 1일(일) 오전 11시 예매 후 장소 병커1

예스24 <http://goo.gl/ndhoaj> 알라딘 <http://goo.gl/AkxzHD>
교보문고 <http://goo.gl/5KLODn> G마켓 <http://goo.gl/HDXKo1>

■ 제공

이담채김치 <http://edamche.com>

컴백홈대리운전 <http://goo.gl/SkTFno>

전창걸의 새싹땅콩차 <http://www.전창걸.com>

코골이119 <http://www.snore119.com>

좋은사람과플라워 <http://flowergood.co.kr>

연지연곰탕 010-7252-1114

[경향신문] [사설] 김수남 총장 내정자, 검찰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경향신문의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에 대한 사설을 보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수사를 맡은 그는 ‘정부의 환율정책을 방해하고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는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장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했을 때는 과잉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가 났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지휘했던 정운회씨 문건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건 핵심 피고인인 조웅천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를 낸 무능한 검사’라는 비판을 받는 게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장 인선이 드러낸 문제점은 이것뿐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청구고 선배다. 아무리 인물난이라 해도 같은 고교 출신이 검찰과 경찰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일은 피해야 마땅하다. 김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구·경북 출신이 대통령 민정수석과 경찰청장, 국제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모두 장악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는 단언컨대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김 내정자로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옥죄려는 게 아니라면 이번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조선일보 역시 “이 정권 초반이던 2년 전에도 김진태 검찰총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찬현 감사원장 등이 모두 경남 출신이었다. 그 위에서 검사 출신으로 사정의 축(軸)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던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경남 출신이었다. 그때도 사정 라인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2년이 지나 되려 더 심해진 것이다”라며 “편중으로 인해 사정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한 지역 일색의 사정기관들 사이엔 견제가 사라지고 끼리끼리 문화가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사정기관들이 문제를 캐고 해결하기보다는 덮고 무마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다. 그게 화근을 만들고 문제를 키워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는다.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방사청, 또 말바꾸기 "4대 기술 이전은 KF-X 개발에 결정적 문제 아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겠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형 전투기의 4개 핵심 기술 이전이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2013년부터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9월 24일엔 "2014년 9월부터 기술이전이 제한될 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말이 또 바뀐 것이다.

군 당국은 2013년 9월 차기 전투기 기종을 미국 보잉사 것으로 정했다가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을 원점 재검토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전투기 기종 중 스텔스기는 록히드마틴사 밖에 없었다. 더 이상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술 이전 협상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방사청은 그때는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장명진 청장 발언에 따르면, 방사청은 사실 이때부터 기술이전이 어렵다는 걸 알고도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한겨레] 이 '괴물 전투기'는 철공소에서 만드나 보다

이번엔 한겨레 살펴보자.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의 글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전투기를 철공소에서 만드는 것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의 문외한이다. 그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는 미국과의 기술이전 협상에 대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장치 등 핵심장비를 개발하는 기술적 준비 정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2014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항공전자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평가 결과는 전자식 레이더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이 요구 수준의 14%에 불과해 체계 개발 가능성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사업 파트너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전자식 레이더 등 항공전자장비의 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조건으로 한국항공과 함께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개발비 투자와 사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개발하게 되면 록히드마틴은 “체계 종합이 어렵다”며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록히드마틴이 불참할 경우 한국항공은 자체 기술력만으로 체계 종합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록히드마틴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사업비 부담은 1.9조 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전자식 레이더 개발에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사업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체계 종합 여부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사업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하고 나올 것이다. 이런 사정을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과연 알았는지도 의문이다.”

[중앙일보] [단독] 박 대통령, 방사청장에게 “왜 사서 고생하시나요.”

철공소에서 공작하는 정도로 전투기 제조를 이해했던 정부 외교 안보라인, 그들의 출세는 눈이 먼 대통령이었기에 가능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요”라고 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장명진 청장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창생이다. 대학 시절 파트너를 이뤄 실험을 함께했던 사이로도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보고는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 4가지 가운데 3가지를 국내에서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 위주였다”며 “A4 용지 8쪽짜리로 된 보고서와 보고서들로부터 보충 설명을 들은 뒤의 박 대통령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정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종합 보고를 들어보니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것 같은데 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미국 기술을 도입하는 데 연연해 스스로 혼란을 키웠느냐’는 뜻이면서 KF-X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27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대통령 대면보고 시 어느 한 분야라도 실패할 수 있다고 보고했느냐. (그런 보고는 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과 방사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가서 한 시간 동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격려 받고 나오셨는데 나는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고 봤더니 속고 있는 게 아니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일보] [이훈범의 생각지도 ...] 202X년 X월 X일 한반도

중앙일보는 오늘자에서 전투기가 없는 대한민국 안보 상황을 가상 소설로 꾸민 이훈범 논설위원의 칼럼을 지면에 실었다. 제목은 ‘202X년 X월 X일 한반도’다.

국정원장 : 국정원장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이른 새벽부터 무슨 일로?

국정원장 :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소. 기갑부대를 포함해 1개 사단병력이 평양으로 이동하고 있고 휴전선에도 경계태세가 내려진 거 같습니다. 김정은이 며칠째 보이지 않아요. 아무래도 쿠

테타가 발생한 것 같소.

쿠데타라니. 안보실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군부 쿠데타라면 북한군이 도박을 할 수도 있었다. 새벽 4시 반. 대통령을 깨워야 하나. 조금 더 기다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 속 다른 목소리도 떨렸다.

국방부장관 : 국방장관입니다.

안보실장 : 아, 그렇잖아도 연락하려 했소. 국정원장 전화 받았어요. 전군에 진돗개 하나(최고경계태세)를 발령하시오.

국방장관 : 진돗개가 아니라 ‘데프콘3’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장사정포대가 배치되고 있고 서해안 해안포대의 포문도 열렸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데프콘4’가 상시 발령된 상태다. 그것을 3단계로 올리면 전작권이 한국군에서 한미연합사로 넘어간다는 얘기다. 한·미 대통령의 합의도 필요하다.

안보실장 : 만일의 경우 대응타격 태세는 어떻소?”

국방장관 : (말을 더듬으며) 아시다시피 공군의 전력공백이 심각합니다.

안보실장 : 내가 결정한 F-35 스텔스기가 있잖소. 이런 때를 대비해 그 많은 돈을 쓴 거요.

국방장관 : 하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F-35 60대로는 부족합니다. 공중전만 하는 게 아니고, 방공레이더도 파괴해야 하고 장사정포와 미사일 전력도 제압해야 하고... 절대적인 수치로 전투기 100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보실장 :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어쩌다.

국방장관 : KF-X(한국형전투기)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F-35를 사면서 이전받고자 했던 기술들을 얻지 못해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안보실장 “ㄸ~응.”

새벽 4시50분. 망설임 시간이 없었다. 대통령을 깨워야겠군. 그때 또 벨이 울렸다.

외교부장관 : 외교장관입니다.

안보실장 : 미국에서 연락이 있었습니까?

외교장관 : 우선 일본입니다. 북한군의 도발이 있을 경우 자위대를 북한 지역에 파병하겠습니다.

안보실장 : 무슨 당치 않은 소리요? 우리 영토에 들어올 땐 우리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오.

외교장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외교장관 :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했는데 국방장관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잖습니까. ‘한·미·일 협회가 필요하다’는 데서 얘기를 마쳤대요.

안보실장 : 이런~. 그래 미국은 뭐라 하오?

외교장관 : 그계... 지금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야기하고 있어서요. 인공 섬을 만들고 12해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 항모가 접근 중이거든요.

안보실장 : 그런데?

외교장관 : 우리더러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가 자기편일 거라 생각하고요.

안보실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안보실장 : 미국과 중국, 양쪽의 구애를 받는 축복이구먼 그래. (과거 윤병세 장관 발언이 그랬음.) 자위대에 대해선 뭐라 합니까?

외교장관 : 지금 자기들도 정신이 없으니 먼저 자위대의 협조를 받으라고 합니다.

새벽 5시10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대통령 핫라인 번호를 눌렀다.

안보실장 : 안보실장입니다.

새벽잠에서 깬 대통령의 낮은 목소리가 넘어왔다. 핫라인의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위 내용은 물론 픽션이다. 사건 배열과 시간적 경과도 무시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하는 걸 보면 언제든 더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구성해 봤다.”

[경향신문] 최경환 “어떤 정부도 예비비 공개한 적 없다” 거짓말 논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마지막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예비비’ 문제로 여야-정부가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는 등 사흘 연속 뼈저거렸다. 이날도 갈등의 불씨는 첫날부터 논란이 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전용한 예비비 44억 원의 내역 자료 제출 여부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정부 3.0’ 정보공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메르스와 세월호 참사, 역외소득 자진신고 관련 예비비 자료가 공개돼 있다”며 “(예비비 공개) 전례가 없었던 최 부총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도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를 공개한 적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는데, 국무위원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임의적으로 알린다”며 “행정부와 국회 관계에서 자료요구 형태로 한 번도 국회에 제출한 적 없다”고 ‘제출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예산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판단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경향신문] 뭘 숨기나... ‘깜깜히’ 국정화 예비비

도대체 왜 이런 거 명쾌하게 못 밝힐까. 또 다른 경향신문 기사 보자. 야당은 예비비 세부 내역에 공개가 될 경우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편법까지 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예결위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나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 “정부 역점 사업인데 내역을 이렇게 퐁퐁 숨기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결위원도 “세부 항목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44억 원 중 17억 원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편찬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27억 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들 예산 중 일부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나 언론 등을 통해 ‘여론 뒤집기’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을 우선 의심하고 있다. 사실일 경우 정부가 여론공작을 위해 사실상의 관련단체들을 동원하는 데 혈세를 투입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토요 정담(政談)] 딸에게 교수 그만두라 한 김무성 “내가 정치 안 했으면 ...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가정사와 관련해 깨알 같은 이야기가 중

알기보에 실렸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출처가 김무성 대표 측이라는 점에서 언론플레이일 가능성도 크다. 김 대표는 마약남편으로 골머리 앓는 딸에게 대학교수직도 그만두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현경 씨는 지난해 8월 수원대 디자인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김 대표 측은 “이번 학기에 맡은 수업은 끝까지 하고 그만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경 씨는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학교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딸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대선 가도에 걸림돌을 치워보겠다 이치지일까?

[한국일보] 아버지 정년 연장, 자식 일자리 뺏는 게 아니었다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자녀 세대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5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시장분석'에 게재된 '고용자 고용 현황과 정년연장의 고용 효과'에 따르면 2008~2014년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와 163개 기초지자체의 장년층과 청년층의 고용률을 분석한 결과, 장년층 고용률이 높은 지역이 청년층 고용률도 높았다. 장년층의 고용률이 높다고 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폭이지만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도 비근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2006년 장년층 고용률이 높아지면 청년층 고용률이 떨어지는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만 그러는 거다.

[한국일보] 청년 박정희의 멘토, 황태성은 왜 총살됐나

토요일 북색션에 실린 책은 김학민 이창훈이 쓴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다. '박정희 장군, 나를 꼭 죽여야겠소'라는 제목에서 항변이 느껴진다. 여기서 '나'는 황태성이다.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북한 김일성의 대남 밀사로 내려와 박정희와 김중필을 만나려고 애쓰던 중 체포돼 간첩 혐의로 처형된 인물이다. 제목의 질문은 황태성 본인의 말은 아니고 출판사가 붙인 것이다. 황태성은 박정희와는 잘 아는 사이였다.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오랜 친구이자 함께 사회주의 운동을 한 동지였다. 박상희는 황태성의 소개로 아내 조귀분을 만나 결혼했다. 박정희가 형처럼 따랐고 청년시절 멘토였다. 황태성으로서는 박정희를 원망했을 법하다.

그는 자신이 남북 협상과 통일 논의를 위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재심을 청구해 기다리던 중 1963년 12월 14일 인천 교외의 군부대에서 총살됐다. 사후 뒤 박정희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간첩인가, 밀사인가. 쿠데타 세력은 왜 그를 죽였을까. 이 책은 한국 현대사의 미스터리로 남은 황태성 사건의 전말과 인간 황태성의 생애를 본격적으로 다룬 첫 단행본이다. 황태성이 처형되기 두 달 전인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윤보선이 박정희의 좌익 전력을 들춰내 공세를 퍼부었다. 미국도 박정희의 사상을 의심했다. 그런 상황에서 황태성의 존재는 화근이었다. 김일성이 황을 밀사로 보낸 것도 박정희의 좌익 전력과, 황태성-박상희-박정희의 친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죽였는지 짐작케 하는 정황이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회고록에 남아 있다. 처형 직전인 12월 초, 사형 집행 승인 서류를 가져온 김형욱과 박정희가 나눈 대화다.

“아까운 사람인데 꼭 사형시켜야 하나?”
 “미국과 야당에 물리지 않으려면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아까운 사람인데 꼭 사형시켜야 하나?”
 “각하, 우리가 미국과 야당에 물리지 않으려면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꼭 죽여야 하느냐고 두 번 반복해 물은 것을 보면 고민스러웠던 모양이다. 황태성 사건은 오늘날 '중북몰이'의 뿌리라 할 공안 조작사건의 원조이기도 하다.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의 누리집 '산타디자이너'에 28일 처음으로 올라온 그래픽. 태극기 위의 얇은 비닐을 반쯤 벗기면, 비닐 아래 숨은 일장기가 나타나는 디자인이다. 또 다른 그래픽에서는 녹아내리는 태극기를 보여주며 '이 땅에 적색만 남게 할 것인가'라는 글을 써놓았다.

■ 날씨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가을 추위가 절정을 이뤘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계속 쌓이는 데다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2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높아 추위가 누그러지겠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다음 주 초에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YTN)

■ 오늘의 칼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이 사람은 이른바 착한 불평등론의 주창자로 묘사됐다. 국내 수구 보수언론에 의해,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이미지가 가공됐을까. 저서 '위대한 탈출'을 오역한 탓이 크다. 번역해 출판한 출판사는 바로 한국경제신문이 만든 출판브랜드 한경BP. 이같은 한경BP의 날림 아니 왜곡된 번역을 들춰낸 인물이 있다. 바로 한겨레경제연구소 김공희 연구위원. 이 분이 오늘 한겨레 토요판에 관련한 커버스토리를 썼다. 일부분 소개하겠다.

“지난 수백 년에 초점을 맞춰 미국의 물질적 웰빙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미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야기가 극적이기도 하고 이 책의 중심 주제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웰빙 수준이 향상될 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빈번히 개인 간 격차가 벌어진다. 변화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종종 불공평하다. (<위대한 탈출>, 196쪽)

자, 어떤 느낌이 드는가? '웰빙 수준의 향상', 곧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느낌, 그러니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 같은 것이 전해지지 않는가? 적어도 불평등 발생의 불가피성을 말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뭔가 좀 애매모호하다. 사실 위 인용문은 원문을 전부 번역한 게 아니다. 번역본의 마지막 문장 '~불공평하다.' 아래 원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장이 곧장 이어진다.

“불평등을 고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개선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뒤처지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불평등은 그 자체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불평등이 뒤쳐진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식으로 작용한다면, 불평등은 성장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 개선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 불평등은 뒤쳐진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반대로 불평등은 아주 고약해질 수도 있고, 이익이 소수의 수중에 너무 집중된 나머지 경제성장을 질식시키고 경제의 작동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한국어판에 누락된 부분)

돈이 본위인 집단, 그게 언론 아니면 자본집단 어디라도 진실을 가공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젖는다. 돈으로 진실을 주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활개 칠 때 그 사회의 건강성은 실추되기 마련이다. 월요일에 오겠다.